

사설

노동절에 떠올린 '운동' 과제

올해 노동절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처음 치러졌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작업이 막 진행되는 시점에 맞게 되었다는 데서 예년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인지 노동절에 떠오른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들도 노동계 통합 문제를 비롯한 주체적 역량 강화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시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초점이 모아졌다.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절을 맞아 나온 요구와 제안을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노사관계 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지난 날의 낡은 노동억압적 제도와 관행이 낡은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 조처가 요구되었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자 개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철폐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활동권 보장,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근로기준 저하 반대, 경영참가제 확립 등이 중심이 되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 확대 또는 사회개혁, 임금억제 정책의 시정과 공공부문에 대한 전임자 축소를 비롯한 경영합리화 조처의 철회 등이 정부에 대한 제안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이런 요구와 제안은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주체적 과제로는 노동계의 통합이 머리 부분에 올라 있다. 여기서도 한국노총의 개혁이 어김없이 강조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상황과 판도에 비추어 노동운동의 통일이 이른 시일 안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이 노동계 통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내세운 것이나, 민주노총이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투쟁'이나 '공동사업'의 추진을 주장한 것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제기된 것은 '정치세력화'인데, 이것은 노조의 정치적·역량 강화와 정치적 진출의 확대를 함축하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일색의 정치구도 아래서 노동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산업별 노조 체계 구축 그리고 조직간의 연대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대내외적 주요 과제의 해결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96년 노동절의 결의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